

전문가 칼럼

사악한 이윤추구의 끝판, 세월호: 재무장해야 할 기업윤리!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쉘퍼터는 '혁신'과 '창조'를 기업 발전의 핵심요소로 강조했다. 즉 기업가는 비전을 가지고 기술 혁신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자본주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혁신의 결과물이 소비자의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오고, 이윤은 이러한 혁신의 대가가 된다. 기업가가

존경받는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버는 부자여서가 아니라, 혁신의 혜택을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가 강조한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뿌리를 둔 것이고, 이윤추구는 그 대가이자 수단이다. 최근의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 반세기 전 세상을 뜬 학자의 견해가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는 기업가 정신도, 기업윤리도 없는 단지 눈앞의 이윤에 눈이 먼 사악한 기업행위의 끝판을 보여준다. 오로지 이윤을 위해, 위험을 불사하며 원칙을 빗겨간 예가 하나들이 아니었다고 한다. 위험요인은 배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을 정도여서, 세월호 그 자체가 총체적 위험물이었다.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분개하는 것도 이 사고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운영회사는 배를 개조하여 객실수를 늘리고, 안전정비에 눈감고 무리한 선적을 할 때마다 불어나는 '돈'을 계산했을 것이다. 경영진에게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단지 '돈'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조차 미래의 지속적인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일회성 돈벌이 수단 말이다. 승객들의 구조요청 절규를 뒤로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전한 퇴선을 위해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천인공노할 행동까지 저지른 걸 보면 그동안 승객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 회사 구성원들이 공유한 기업윤리는, 최상의 가치기준은 이윤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않았을까?

굳이 세월호만이 아니더라도 올해 초의 건물붕괴로 인한 대학생 참사사건, 최근 아산의 신축건물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유해물질 기준치를 어기는 식품안전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륜을 저버리는 탐욕의 끔찍한 결과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쉘퍼터가 말한 혁신은 그 결과물이 현 세대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삶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다. 기업윤리의 부재로 인한 불행한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기업 자체의 파멸은 물론 미래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황금오리의 배를 가르고, 미래의 세대에게는 죽은 오리만을 남겨주는 것처럼 무책임한 행위이다.

소비자의 인권 즉 안전, 건강, 생명 등을 존중하는 기업경영에 추가 비용이 든다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비용인데, 이런 비용지출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의식, 인권의식을 다시 일깨우는 창의성, 이런 비용지출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도록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창의성, 기업가에는 바로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어진 대로만 행동하는 관료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일 것이다. 건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다면 윤리경영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소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발벗고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야만 기업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기업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협력업체와 거래 시에도 평가 받는 CSR

동반성장과 상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시 CSR 요소를 고려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국내 S기업은 매년 각 협력사에 CSR 자가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D기업은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윤리경영, 노사관리, 환경관리 부분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협력업체의 제품·서비스 문제가 터졌을 때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업 풍토가 이전 바뀌고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민간단체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돕기 위해 제작된 'NPO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PO 지속가능성 보고 지표는 민간단체의 일반적 개요를 설명하는 '조직 프로필', 운영 측면에서 경제·사회·환경 성과들을 보고하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체계와 성과를 보고하는 '프로그램 효과성' 등 세 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했다. 센터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PO(Non Profit Organization) :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

사회적 책임 등한시하는 외국기업, 보상시스템 통한 기부 유도 필요

국내에 입성한 명품 외국계 브랜드들은 기부금은 고사하고 본사로 귀속 되는 배당을 늘리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으며, 외국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세금혜택 등 구체적인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유럽 기업의 사회 책임 정보공개 의무화

지난 4월 유럽연합 의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업 및 그룹에 대하여 환경·사회·인권·반부패 등 비재무정보 및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침에 의하면, 종업원수가 500인을 넘는 기업들은 환경문제, 사회 및 피고용 측면,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 방지 이슈와 이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과 위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속 가능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의 근본은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의 사회공헌활동 '집단효과'

세계공동모금회 (United Way Worldwide) 브라이언 갤러거 회장은 오늘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 간 협력 체계인 '집단효과(Collective Impact)'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예로, 초콜릿 회사 Mars는 코코아 원재료 주요 생산지인 코트디부아르 농가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부, NPO, 경쟁 기업과 협력하여 선진농법 전수, 농민들과 영양 및 건강보호, 도로 건설 등 프로젝트를 펼쳤고, 그 결과 코코아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3배까지 늘어났고 농가 가구 소득 역시 증가했다.

*집단효과 : 기업, 정부, NPO, 학계 등 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공통의 특정 목표(사회문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뜻함

'2014년 최우수 기업시민' 1위로 인정받은 'BMS'

세계적인 바이오·제약회사인 BMS(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잡지인 CR매거진으로부터 2014년 *'100대 최우수 시민기업' 중 1위에 선정됐다. BMS 회장은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BMS의 핵심사명이며, 이를 환자·직원·협력사·주주·환경을 대상으로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대 최우수 시민기업 :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러셀지수(Russell Index)를 기준으로 뽑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기후변화, 노사관계, 인권, 기업지배구조, 재정, 기업철학 등 7개 영역 300가지에 달하는 데이터 점수를 평가해 선정

행사
브리핑

제주포럼 2014

UNGC 한국협회 반부패 세션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5월 29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UNGC 한국협회 반부패 세션'이 열렸다. 'UNGC 한국협회 반부패 세션'은 급변하는 전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중요한 화두가 되어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서는 윤리경영과 청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위기관리 능력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보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국제환경의 변화로 청렴과 윤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전하며 "아시아의 발전적인 미래, 세계의 모범이 되는 으뜸국가의 길은 청렴과 윤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대 다자간 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2011년 제 6회 포럼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5월 개최되고 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보험업계의 윤리적 이슈를 다루고 국내·외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 사례를 살펴 본다.

보험가입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 불완전판매

보험업계에서 반복되어 온 불완전판매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보험안내자료나 광고에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보험을 은행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고, 모집수수료를 더 받아내기 위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신규로 가입시키는 방법, 실질적으로는 펀드처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보험상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는 결국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사례 불완전판매가 횡행하는 카드슈랑스

최근 보험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카드슈랑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하여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전화 상담원들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저축성보험을 '우수고객을 위해 별도로 내놓은 적립식 상품'이라고 안내하거나 '목돈 만들기 좋은 상품', '비과세 복리상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보험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 외면한 비윤리경영

여러 보험사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들이나 정비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맺으며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보험 설계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례 불공정계약 통해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사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 해지 건에 대해서도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지우고 있다. A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고, B보험사는 계약 마감 후 청약 철회 등과 함께 민원해지를 수수료 반납 사유로 명시했다. 특수고용종사자로 노동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보험사들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반면, 보험사의 특수한 기능을 살려 위험보장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국내외 보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보험사들의 경우 소액보험, 노령 인구를 위한 보험을 제공하는 등 보험업 분야와 CSR이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례 미국 보험사들의현명한상생전략

최근 미국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건강한 고객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권하고, 주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도록 하고, 담당 주치의를 배정하여 식단도 짜준다. 그 결과 미국 C보험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7배나 성장하였으며, 건강관리서비스로 이 보험사의 장기 가입자들 중 유방암이 26% 예방되었고, 폐렴 20%, 독감 40%, 당뇨 70%가 개선되었다. 보험사들의 상생 전략이 보험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윤리경영 스터디

기업의 준법경영을 책임지는 윤리&컴플라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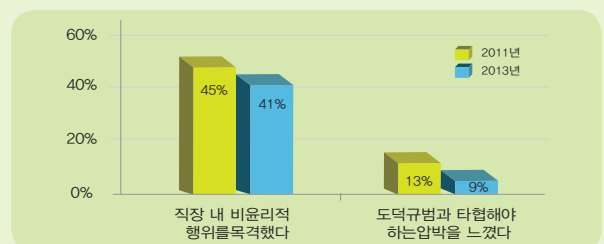
『2013 기업윤리설문조사』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미국 기업윤리센터에서 발표한 '2013 기업윤리설문조사' 보고서를 소개하고 조사 결과에서 도출해낸 시사점을 통해 효율적인 윤리 경영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기업윤리센터(ERC)의 '2013 기업윤리설문조사(NBES: National Business Ethics Survey of the U.S. Workforce)' 보고서는 직장 윤리와 컴플라이언스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윤리 문화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윤리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기업의 주의와 윤리 문화 강조로 줄어든 비윤리적 행위

ERC의 2013년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직장 내 윤리와 관련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직장 내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했다고 답한 직원들의 비율이 2007년에는 55%, 2011년에는 45%를 기록했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41%로 감소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직장 내에서 도덕규범과 타협해야 하는 압박을 느꼈다고 답한 직원들의 비율이 2011년 13%에서 최근 9%로 감소했다. 기업이 윤리적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강력한 윤리 문화를 구축했을 때, 기업 내의 비윤리적 행위는 현저하게 낮아진다.



▶ 4면에서 계속됩니다.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드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스에서는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윤리경영 감독체계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윤리경영 감독체계 운영

기업의 윤리 문화와 윤리경영 내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윤리경영 감독은 기업의 윤리적 경영 정도를 측정하여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윤리경영 감독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기업 내에서 전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윤리경영 프로그램 실천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겪는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근무 환경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잠재적으로 감시하는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

준법감시인 제도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임직원들이 규정, 정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사전적·상시적으로 통제·감시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은 회사 내부에 컴플라이언스팀이나 준법감시인을 두어 임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준법감시인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인으로 두는 기업들도 있지만, 준법감시인은 업무특성상

영업을 포함한 회사 운영 전반적인 내용을 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기업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 준법감시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내 권한이 큰 임원이 준법감시 업무를 맡아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운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고 법 위반 방지활동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이다. 컴플라이언스는 본래 금융 부문에서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7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 ② 준법지원인의 임명
-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④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용
- ⑤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 ⑥ 관련 법규 위반직원에 대한 제재
-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기업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이나 벌금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다음 호에서는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어집니다.

☞ 3면에서 이어집니다.

내부고발 활성화 전략

2013년 조사 결과, 목격한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줄어 들었다.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한 직원에 대한 보복은 직원들의 내부 고발 의지를 저해하여 조직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고발을 했던 직원들 가운데, 과거에 보복을 당한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한다면 또 고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적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고발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반(反)보복 기준을 무시하는 직원들에게는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고위 관리자들이 투명하다고 확신하는 직원들과 확신하지 못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고발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직속상관의 개인적 행동이 윤리적이라고 믿는 직원들 중에서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는 비율이 73%였고, 직속상관이 윤리적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직원들 중에서는 51%만이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였다. 이 수치는

관리자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인지에 따라 직원들이 고발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사점

윤리경영은 미국 사회에서 '뉴 노멀'로 자리잡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 본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조사 결과들은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기업 내의 비윤리적 행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고위 관리자들은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윤리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등 회사 전반에 걸친 윤리적 노력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기업은 관리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다룰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윤리&컴플라이언스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내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 행동을 감독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강력한 반부패 규제 가이드라인이 비윤리적 행위가 판치는 낡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Q 최근, 공정무역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분쟁광물규제'로 인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분쟁광물규제'란 무엇이며, 이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세요.

A '분쟁광물'이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천연 자원을 말합니다. 분쟁지역에서는 민간인을 강제 동원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팔아 전쟁을 위한 무기 구입을 하는 등, 광물이 무력분쟁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어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탄탈륨, 금, 주석과 텅스텐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 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도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규제의 첫 보고가 시행(2014년 5월 말) 되면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물은 전세계 전자제품의 25%에 들어가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광물의 공급망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원산지 추적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을 위한 규제가 자칫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상장사에 납품하는 협력사로서, 제품에 사용하는 광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분쟁광물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회로기판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윤리적 공급망 관리 세미나 (스웨덴 기업 초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되어 온 스웨덴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윤리적 공급망 경영의 우수사례를 제공할 예정

- 주최: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시: 2014년 6월 3일(화)
- 장소: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남산룸 #3

2014년 기후변화연구 공동학술대회

기후변화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기후변화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

- 주최: 한국기후변화학회
- 일시: 2014년 6월 19일(목)~20일(금)
- 장소: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ACSEE 2014 (The Asian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Energy & the Environment)

지속가능한 세계를 추구하는 전문가들의 연설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이슈들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 예정

- 주최: IAFOR
- 일시: 2014년 6월 12일(목)~15일(일)
- 장소: Rihga Royal Hotel & The Osak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Osaka, Japan

5th Annual Responsible Extractives Summit

전문가들의 연설을 통해 채굴산업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전략 등을 살펴볼 예정

- 주최: Ethical Corporation
- 일시: 2014년 6월 23일(월)~24일(화)
- 장소: Regents Park Marriott, London, UK

2014년 청렴정책 전수과정 운영

5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2014년 청렴정책 전수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위원회 반부패 정책·제도, 사례 등을 민간 부문에 공유하여 기업윤리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렴정책 전수과정에는 '청렴도 평가', '행동강령' 등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효과를 거둔 청렴제도의 운영방법과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소개하여 기업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

'2014년 청렴정책 전수과정'은 2013년 4회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현대건설 등 12개 기업 24명 윤리·준법

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올해 9월 2차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Yes 준비! Ok 윤리!

스팸 야근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만)

Q

본래 금융 부문에서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도록 만드는 자율적인 준법시스템을 무엇이라 하는가?

- 1) 윤리경영시스템 2) 불만신고시스템 3) 부패방지시스템 4)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2번, 주관성**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양점남(did91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장남호님, 최전호님, 안경민님, 김진호님, 김건희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